헌법 전문 수록 빠진 5·18 기념식…임 행진곡 제창만

임을 위한 행진곡 보수 정권서 첫 제창 의미
5·18 헌법 전문 수록…진상 규명 기념사 빠져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하는 5·18 제42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권 처음으로 민주화를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다만 기념사에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오월을 드립니다'

'오월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한 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 정·관계 주요 인사, 5·18민주유공자·유족·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헌화·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거행됐다.

추모 공연은 '오월의 택시, 진실을 향해 달린다'는 영상과 함께 이뤄졌다. 영상에선 배우 이지훈이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온 42년 전 택시를 몰고 전남대학교 정문, 금남로 전일빌딩245, 옛 전남도청, 옛 적십자병원,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 '임을 위한 행진곡' 보수 정권 첫 제창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5·18단체장과 유족의 양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첫 소절부터 끝까지 불렀다. 이는 역대 보수 대통령 중 첫 사례다.

보수 정권이 주관하는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포함돼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른 것도 이례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인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대통령의 거부감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정권들은 공식 식순 제외, 합창 변경, 기념곡 제외 등으로 의도적으로 방해 활동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보수 정부 처음으로 5·18 유족과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해 기념식장에 들어섰다. 방명록에는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직접 언급 없어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오월 정신의 숭고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인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인권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다"고 역설했다.

다만,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개운치 않다는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녹록찮은 개헌 절차와 국민의힘 안팎의 정치역학적 냉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 "헌법 전문 수록 추진해 진정성 보여야"

5·18단체도 윤 대통령이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종수 5·18공로자회장은 "대통령이 재차 수록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끝내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도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며 "현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포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18민중항쟁 행사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전문 수록, 온전한 진상 규명, 역사 왜곡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야당은 헌정특위를 꾸려 5·18 정신 전문 수록뿐 아니라 전체 개헌 문제까지 다루자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민주 "5·18 왜곡 김진태 사퇴해야"

박지현 "협치 기본 역지사지…윤재순·이시원 사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인 18일 광주를 찾아 "(오월 정신을 이어가는 노력의) 조치 첫 번째는 5·18 왜곡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사퇴가 첫 번째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월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5·18은 우리 공동체 민주주의 기본사상을 만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있다"며 "이번 정부가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이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협치의 기본은 역지사지"라며 "어제(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윤재순과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도 임명했는데, 협치를 말하려면 이들 사퇴부터 돼야 한다. 그게 이제 광주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여야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진실이 다 밝혀져 있지 않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전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5·18 정신이 제대로 받들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했다.

이어 "5·18 광주를 폄훼하고, 혐오의 발언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직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부터 반성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가 앞으로 개정 헌법을 논의할 때, 5·18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그 문구가 헌법 전문에 추가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쉽게도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사에 그 부분을 발언하는 걸 검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이뤄질 때는 헌정개혁특위를 만들어 5·18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는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여권을 겨냥해 "신검부의 등장을 경계하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민주의문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 참석을 위해 민주의문을 통과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기간 北도발 시 플랜B 마련"

대통령실 "회담 중 도발시 즉각 방위태세 돌입"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 가능성은 낮게 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대통령실 국민소통관 브리핑룸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바이든 방한기간 동안 북한이 ICBM도발 및 바이든 대통령의 DMZ 방문 가능성'을 묻자 "정상회담 2박3일 기간에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이 들어가도록 플랜비를 마련해 놓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선 이번 주말까지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평가되고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에 북한 지원 방안이 담기나'라는 질문에는 "우선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 코로나라든지, 보건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다"며 "미국도 북한의 뜻을 타진해봤으나 응답이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또 "한미가 논의는 할 수 있겠으나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로 꼽히는 북한 도발 대응 방안과 관련해 "크게 세갈래(북한, 경제안보, 아태지역 역내 협력및 글로벌 이슈) 의제를 비중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경제안보나 기후변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한미간의 확실하고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건지 액션 플랜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전남도당 지방선거 출마자 선대위 출범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등 필승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8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6·1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하는 선대위 출범식과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지역구 국회의원, 당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마자들은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우리 모두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최선의 노력으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들은 "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 평범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도민 곁에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 도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공정하고 깨끗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치르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 5년 후 정권 탈환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합수단 부활 '여의도 저승사자' 어딜 겨눌까

한동훈 '1호 지시'…서울남부지검에 부활 증권범죄합수단

법무부 수장에 오른 한동훈 장관의 '1호 지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이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공교롭게도 검사 시절 자신에게 '좌천 인생'을 선사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명분으로 폐지시킨 수사단이다. 한 장관은 합수단 재출범을 전하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한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에 대한 비판과 차별화를 동시에 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던 한 장관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평가받았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 추 전 장관의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단행한 직제 개편에서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에서 '첫 발'이라는 표현과 함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알렸다. 그러면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달아 합수단 폐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등 다양한 현안 중에서도 합수단 부활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민 피해'를 떠올리게 하는 분야의 범죄 척결에 방점을 찍어 '정치적 인물'이라는 논란을 고려했다는 의견도 있다.

자신을 거듭 좌천시켰던 추 전 장관과 그의 뒤를 이은 박 전 장관의 판단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증권범죄합수단 재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으나, 검사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수사팀 수사→검사실 기소·공소유지)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전했다.

민주, 한덕수 인준 고심…"자유투표할 수도"

한동훈 임명 강행에 강경론↑…'발목' 프레임 부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20일 본회의 인준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절대불가를 외쳤던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만큼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지만, 6·1 지방선거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에 빠지는 것만은 피해야 하기에 정호영 후보자를 정리하는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석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이미 (한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보고 국민도 그렇게 본다"며 "그럼 부적격 부결(할지), 부적격 인준(할지) 두가지인데, 둘 중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배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해놓고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크게 감사해서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기획·생각을 하는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라"며 "정호영 '아웃'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치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며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인사 (임명) 강행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문제된 인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읽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인준 표결에 참여해서 동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호 매 만 평

이태헌